

담양군 그린벨트 내 '창고' 건축 논란

K위탁영농(유), 보조금 수천만원 부정수급 의혹
군 관계자 "현재 적법성 여부 관계법령 검토 중"



담양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들어선 이른바 '쌍둥이 창고'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7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 쌍둥이

창고는 고서면 성월리 그린벨트 내 농지에 각각 연면적 198㎡ 규모로 일반창고, 저온창고 등 2개 동으로 지어졌다. K위탁영농유한회사(이하 K회

사)대표 C씨는 지난 2009년 1월 일반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해 5월 25일 사용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저온저장고의 경우 K회사가 같은 해 5월 14일 저온저장고 보조사업자로 군 농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선정 됐으나 건축허가 과정에서 기존 보조금을 받은 일반창고(198㎡)로 인해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C씨는 "당시 K회사의 이사인 J씨 개인의 명의를 빌려 7월 10일 저온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7월 14일 착공해 11월 20일 소유권 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허가 당시 건축주가 일반창고는 K회사, 저온창고는 개인 J씨인데, K회사 1곳이 1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모두 받았다는 점이다.

본지 취재 결과 2009년 1년 동안에 건축허가를 받은 창고 2동의 사업비는 일반창고 1억원, 저온창고 1억8천만원 등 2억 8천만원으로

이 중 50%인 1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저온창고의 경우 개인 J씨가 7월 14일 착공을 했는데 다음날인 15일 보조금 중 80%인 7천200만원의 착수금이 K회사로 입금됐다.

더구나 저온창고의 경우 자부담금을 먼저 사용하고 보조금을 나중에 집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도 보조금 9천만원 중 약 80%인 7천 200만원을 착수금으로 착공 당시 먼저 지불하고 잔금 1천 800만원은 소유권 이전 후 50여일이 지난 2010년 1월11일 지급됐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K회사가 그린벨트에 일반창고와 저온창고 등 2동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농정심의위원들이 몰랐는지 의심스럽다"며 보조금을 받은 것이 정당한 것인지 관계 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해당 창고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우량 신안군수, 김봉오 목포대 교수, 박석곤 순천대 교수, 광주전남연구원 송태갑 박사, 이병진 디웍스앤컴퍼니 대표, 박봉순 도 동부지역본부장 등이 9일 신안군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주변의 난대숲 복원지와 평화숲, 큰바위열굴을 조망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숲길을 돌아보고, 블루이코노미 혁신성장 전략 중 하나인 블루투어 계획을 논의했다.

'DJ 고향' 신안 하의도에 한반도 평화의 숲 조성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전남 신안 하의도에 한반도 평화의 숲이 조성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혁신성장 전략 가운데 하나인 '블루 투어' 구상을 위해 9일 신안 하의도 한반도 평화의 숲 대상지와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다.

이날 하의도 한반도 평화의 숲 구상에는 김봉오 목포대 교수, 박석곤 순천대 교수, 송태갑 광주전남연구원 박사, 이병진 디웍스앤컴퍼니 대표가 함께 하며 하의도를 아시아의 평화 성지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는 전국 섬의 65%가 위치하고 있으나 섬 지역 대부분 숲이 훼손돼 있어 이를 생태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경관 숲을 조성, '블루 투어' 관광기반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남해안 섬숲 복원사업 10개년 계획'을 세워 4000여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안 하의도는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어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평화의 섬으로 불린다.

1999년 종친들이 중심이 돼 복원한 김 전 대통령의 생가와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후광리 생가 부근 3만5000㎡에 하의도 마파크가 조성돼 있다.

전남도는 '블루 투어' 선도시업으로 아시아 평화의 성지로 하의도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의 숲 조성을 위해 신안군과 지난 9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시범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김 전 대통령 뜻의 뜻을 기리고 보전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하의도 섬 곳곳을 스토리텔링 숲길 조성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바다, 섬, 하늘, 숲, 바람 등 청정 블루 자원의 보고로, 하의도는 김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평화의 성지"라며 "현장 구상에서 논의된 의견을 2020년 시범사업 계획에 반영해 하의도를 남해안의 기적을 일구는 '블루 투어'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성군,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125억 지급

1만3927농가 지급 완료

보성군은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금 125억원을 1만 3927농가에 지급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지급된 쌀 고정직불금은 6777농가에 92억6000만원, 밭 직불금은 6657농가에 31억2000만원, 조건불리 직불금은 493농가 1억4000만원으로 총 125억원이다.

지급단가는 1ha당 쌀 고정직불금이 진흥지역 107만6416원, 비 진흥지역은 80만7312원이다.

밭 직불금은 진흥지역 70만 2938원, 비진흥지역 52만7204원, 논 이모작은 50만원,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지 65만원, 초지 40

만원이다.

쌀 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는 전년과 동일하지만 밭 직불금과 조건불리 직불금은 전년대비 1ha당 5만원이 인상됐다.

지원대상 농지는 쌀 고정 직불금의 경우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밭 직불금은 2012년~2014년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직불금은 2003~2005년 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가을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던 만큼 직불금 지급으로 농가들의 소득보장은 물론 농업 경영 안정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광주소방 "청렴도 확 높인다"

'공익제보시스템' 도입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청렴문화 향상에 적극 나섰다.

10일 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제고하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익제보시스템인 헬프라인 '레드 휘슬'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전화나 게시판 등을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의 부담감을 줄이고, 소통문화 정착과 적극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갑질행위 △소비 위 △부당인사 개입 및 예산낭비 행위 △부정청탁행위 △금품·향응 수수행위 △관행적 부패행위 등이다. 이용은 소방공무원과 민원인 모두 가능하다.

제보는 스마트폰 앱(APP), QR코드 및 컴퓨터를 활용해 광주소



방 전용 익명제보 시스템 '레드 휘슬'에 접속한 후 할 수 있으며, 최대 7일 이내 접수와 처리진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소방본부는 IP 추적방지 시스템, 암호화, 로그파일 자동 삭제 기능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황기석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공익제보 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남에는 노사민정 사적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 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